

Internalization of ‘Confucian Th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Filial Conduct Awarding Ceremonies

Seonyeong Park

Abstract: This is a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traditional practices into new o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ow they penetrated the daily life of Koreans. For this, it looked into ‘filial conduc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raditional practic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aid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filial conduct and exploited it to ‘Creating a Good People’ while emphasizing moral practice. To promote this widely, they created ‘awarding ceremonies’ as collective commemorative events, which confirmed that strong control and discipline based on community values were inherent. Furthermore,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se awarding ceremonies worked as a device in which the obedience mechanism to win over and control the body was operated while progressing as relatively simple ev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made colonial power percolate into daily life unconsciously using traditions fabricated by the colonial power. However, since it was not able to look into other traditional practices as focused on filial conduct only, this study likes to leave it as a future task.

Key Words: Confucianism, Filial Conduct, Awarding Ceremonies, Discipline, Control

일제강점기 ‘유교적인 것’의 내면화 -효행 표창식을 중심으로*

박 선 영**

요약: 본고는 전통적 관행인 ‘효행’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새로운 것’으로 내면화되는 과정과 이것이 어떻게 조선인의 일상에 침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선량한 국민 만들기’를 소환하였다. 이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적 기념행사인 ‘표창식’이 고안되었고,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통제와 규율이 내재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본고는 표창식이 비교적 간단한 행사로 진행되면서 신체를 포섭, 통제하는 복종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효행 표창식이 바로 식민권력이 기존의 익숙한 전통을 이용하여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내면화하는 통제의 제도적 장치였음을 규명한 것에 의의를 두었다. 효행 이외 전통적 관행의 근대적 내면화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유교, 효행, 표창식, 규율, 통제

□ 접수일: 2021년 11월 20일, 수정일: 2021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0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Jeonju Univ., Email: shlsy241@jj.ac.kr)

I. 서론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아 통치하였다. 이후 유교적 가족 질서는 조선왕조의 사회 안정화 기반책으로 활용되었고, 이때 ‘효(孝)’의 가치가 주목되었다. 효는 전통적으로 동양 고유의 도덕 가치로 여겨진 유교 윤리였다. 조선왕조는 일반 백성들에게 효행을 강조하면서 사회를 교화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민간에 널리 보급시킬 방법이 필요했으며, 정표(旌表)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박주, 1990: 1-5). 조선시대에는 매년 효자·절부 등에게 포상이 내려졌고, 그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포상을 받은 자들은 일반인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조선왕조도 이를 미풍양속으로 진작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면서 조선왕조의 통치권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격리와 배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효는 배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효는 전통적 관습으로 조선인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렸던 유교 윤리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게 익숙한 효행을 소환하고, 식민정책으로 이용하여 포섭해 나가려고 하였다.¹⁾ 다만 이때의 효는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9세기 근대 국민 국가들은 과거를 소환해 경쟁하듯이 ‘만들어진 전통’을 고안해냈다. ‘만들어진 전통’은 새로운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국가의 사회질서를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Hobsbawm, 2004: 19-41). 이렇게 현재를 과거의 연장선 상에서 인식하게 되고, 전통은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면서 규범적 힘을 얻게 되었다(김윤희, 2019: 34-38).

‘만들어진 전통’은 국가기념일, 국가의례 등의 국가 상징물로 실현되었다. 국가 상징물은 강력한 국가를 드러내어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지배권력은 ‘국가-국민’의 구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의도했다. 국가기념일마다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또 다양한 기념행사를 주최하면서 주민들을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에 집결시켰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국민’ 정체성과 공동체적 동시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시각적 지배를 상징화하였

1) 그동안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과 유교이데올로기의 식민지적 변용 사례를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 중 ‘효행’을 충(忠) 개념과 합치한 ‘충효일치(忠孝一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효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관, 국민도덕론으로 확장되었다. 지면 상 대표적으로 소개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류미나, 2007; 2010; 박선영, 2016; 설주희 2020; 이명화, 1993).

다(Fujitani, 2003: 101-130). 집단적 기념행위는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궁극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도록 유도되는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집단적 기념행위는 국가의 통제와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지배를 상징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전통의 소환을 주목하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의미로 내면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 관습의 대표 사례인 '효행'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제강점기 효행의 상징성과 이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창조된 '표창식'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로, 조선총독부가 전통적 도덕 가치인 효행을 이용하여 행위규범으로써 상징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공식적으로 효행을 '선행'으로 도식화하여 널리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표창²⁾하였다. 이때 '선행'은 식민지적 사회 질서로 편입된 '유교적인 것'이었으며, 그 최종 목표는 '선량한 국민 만들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로, 효행 표창식에 내재된 지배권력의 통제와 규율권력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식적으로 효행 표창식은 '모범적인 국민'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가 효행을 기념하여 공식 행사로 개최하면서 공동체적 가치 함양과 함께 공동체적 동시성을 염두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민'으로의 소속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위계질서의 정당화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권위 관계 구축과 조선인의 신체를 통제하여 규율화했던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사회 규범으로 소환된 '유교적인 것'을 분석함으로써 파편화된 전통적 관습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며, 미시사적 관점에서 식민지적 복종메커니즘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침투한 근대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식민지 조선의 '포상'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포상'은 '정부가 주는 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근대 일본의 '포상' 제도는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치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공동체로 통합한다는 것으로 두 가지 성격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자는 훈장(勳賞), 후자는 포상(褒賞)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표창은 포상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포상은 후자에 제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명시하여 둔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박선영, 2020).

II. 일제강점기 효행 표창과 ‘선량한 국민’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지배해나갔다.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함에 따라 유교적 가족 질서를 수립하여 사회 교화를 의도하였다. 당시 위정자들은 유교 윤리를 통한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 나갔다.

대표적인 유교 윤리로 삼강오륜을 들 수 있다. 당시 삼강오륜은 신분 윤리로서 이해되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가정에서는 자식보다 부모를, 아내보다 남편을 상위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도 상하 관계의 질서가 수립된 것이다. 가족적 유교 질서를 수립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조선 사회 내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사회→국가’로 상위 개념이 구조화되는 질서가 수립되었다(박주, 1990: 220-221). 이렇게 조선왕조는 효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 교화를 주도해나갔다.

효행은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로 인식되어 왔던 도덕적 가치였다. 효행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함이 기본 전제이다. 효행도 마찬가지로 조선왕조가 구조화 한 계층 질서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효행은 인간으로서 함양해야하는 도덕 그 자체로서 일반 사회에 상용된다면 조선왕조가 의도하는 계층 구조가 그대로 납득된다는 데에서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효행을 적극 장려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세워졌으며 지속적으로 포상도 주어졌던 것이다. 효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인들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요소로 내면화되었다.

한편 근대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유교를 활용하였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일본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으로 유교를 강조하였다. 대표 사례로 1890년에 발표된 ‘교육칙어(教育勅語)’를 들 수 있다. 교육칙어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효(忠孝)’를 위시하여 ‘천황’을 존중하고 충량한 신민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메이지 정부는 일본 민중을 ‘국민화’하였다. 또한 이는 가족국가관, 국민도덕론 등으로 확장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치적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되었다. 사회 윤리체계를 확립하여 천황제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류미나, 2010: 130-134). 일본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서 전통적 도덕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개념인 ‘국가’와 일본 ‘천황’을 위한 ‘국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했다.

일본은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국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교 논리를 이용했던 경험을 조선에 그대로 대입했다. 특히 그동안 조선인들에게 미친 유교의 영향력은 일

상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때문에 조선에서도 익숙한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장악해나가고자 하였다(이명화, 1993: 2-5).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은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루 빨리 일본식에 적응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일본에 충성하는 ‘국민’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선의 것을 전부 배제하고 일본의 제도, 정책을 막연히 주입하는 것은 더 큰 반발심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었다. 더불어 조선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조선의 정체성을 일시에 말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들에게 익숙한 것을 새롭게,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하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효행을 장려하며 포상하는 것은 조선인에게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처럼 내면화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효행은 조선인들에게 관습으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역시 조선의 전통적 관습에 주목하여 익숙한 것을 이용하였다. 그는 한일병합이 체결된 직후 전국적으로 효자·절부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효자·절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조사는 9월 말에 마쳤다. 병합된 지 한 달 만에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에 3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표창되었다³⁾(박선영, 2016: 409-414). 그가 효행에 주목한 원인은 조선인에게 효자·절부란 사회의 선행(善行)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데라우치 총독의 유고(諭告)로, 당시 효행의 상징성과 함께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겠다.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의 신민이 되어 천황폐하가 어루만져 기르는 교화를 입고 길이 깊고 두터운 인덕(仁德)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 또 반족유생(班族儒生) 중에 기로(耆老)로서 능히 서민의 사표(師表)될 자에게는 상치(尙齒)의 은전을 베풀고, 효자와 절부 중에 향당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내려서 그 덕행을 표창하게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10. 8. 29.).

3) 당시 전통 유학자들 중에서 조선총독부의 효행 표창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례로 유학자 김창숙은 “은사금을 받은 자들을 만나면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돈에 팔려서 적에게 아첨하는 자는 바로 개, 돼지다. 명색 양반이라면서 효자·열녀의 표창에 끼여든단 말이나’”라고 하였고(심산사상연구회, 1997: 233), 송사 기우만도 ‘지금처럼 삼강이 무너지고 부군망국자(負君亡國者)가 위복(威服)을 누리는 때에 포상을 받는 것은 누가 된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松沙先生文集』 권12).

조선총독부가 우선적으로 주목한 계층은 양반유생과 효자·절부였다. 양반유생은 조선시대 신분 체계에서 상위에 속하였으며, 효자·절부 또한 향당의 모범 인물로써 인식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족질서를 이용하면서 이들을 포섭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박선영, 2016: 409-427).

대표적으로 효자·절부를 모범 인물을 설정한 데에는 조선총독부가 의도하는 ‘국민상’과 연계되었다. 즉 그들을 계속해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을 모범 행동으로 규범화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해나가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조선 고유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융합시켜 조선인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과 일본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것’ = ‘근대’ = ‘일본 제국’이라는 도식을 부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조가 시행했던 특전을 장악함에 따라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일례로 조선왕조와 조선총독부의 포상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만근(挽近) 이래로 형식적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효행과 특출한 열절(烈節)이 있을지라도 세력과 금전이 없는 사람은 민멸무문(泯滅無聞)하여 공의(公議)의 억울함이 종종 있으니, 이것이 어찌 포양하는 본이라 하리오. ……과거와 같지 않아 향곡(鄕曲)의 미천한 사람이라도 근신자수(謹愼自守)하여 뛰어난 절행이 있다면 조정에서 표창의 예를 베풀고, 향당에서 우러러 보는 영예를 얻을지니 아! 우리 동포는 각자 면려하여 투신(持身)하기를 공손히 하며 수행하기 효순(孝順)히 하여 메이지 성세의 선량한 백성[良民]이 되면 위로는 교화가 행하고, 아래로는 풍속이 아름다워져 태평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문명의 정치에 동욕(同浴)함은 우리의 확신하는 바이로다(『매일신보』, 1910. 11. 5.).

이를 종합하면 첫째로, 조선시대 효행 표창은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선시대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기에 미천한 신분은 아무리 뛰어난 효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의 폐단을 부각시켰다. 반면 자신들의 효행 표창은 신분에 귀속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운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둘째로, 각자의 위치에서 몸을 던져 효행을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효행의 실천은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선량한 국민’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일본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을 납득시키면서 새로운 지배체제의 정당화를 도모했다. 나아가 효행을 이용하여 새로운 ‘국민’으로써의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효행 표창은 한일병합 직후부터 시행되어 해방 전까지 전 시기 동안 유지되었다. 특히 일제 초기부터 1920~30년대 초반까지 늘어나는 추이⁴⁾를 보이고 있다(박선영, 2016: 409-412).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여 지배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통치 권력의 등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기에 일제 초기부터 주목되어 시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효행의 도덕적 실천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일상적으로 도덕 실천을 생활화하여 사회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효의 가치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류미나, 2010: 147-150).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사회질서 체계 내에서 효행이 행동규범으로 내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효행이 강조되었다.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부터 교육과정 내에 수신(修身) 교과를 편입시킨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 역시 과거의 효행을 소환하여 식민지 통치에 이용한 것이었다. 효행 강조는 충효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삶 보다도 국가와 '천황'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하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을 내재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효행은 학생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인식되었다(김순전 외, 2006; 이병담, 2007: 124-128).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국민' 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효행을 도덕으로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효행은 전통적 유교 윤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재조직화되어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선량한 국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소환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새로운 '국민'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효행을 이용하였다. 효행은 일본 '천황'으로 향하는 사회질서를 구조화되었고, 꼭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도덕으로 강조되었다. 이렇게 효행은 일상생활에 '천황'에 대한 '선량한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천황'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으로 스며들었다.

4) 조선총독부는 1934년 「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혼례·장례·제례를 통제하면서 의례를 간소화시켰다. 이를 통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자 했다(김혜영, 2017: 169-174). 전시체제기에 효행 표창보다 인적·물적 자원 동원의 연장선 상에서 '총후전사'나 '중견인물'에 대한 표창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박선영, 2020). 즉 전시체제기는 효율적인 전쟁 물자 마련과 대중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III. 전통의 창조, ‘효행 표창식’

조선시대 효자·절부에 대한 포상은 그들의 선행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효자·절부를 선망의 대상으로 상징화하여 유교적 가족 질서가 수립했다. 그러나 포상과 함께 효자·절부를 기념하는 방식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차이점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입구에 정문(旌門)을 세우거나 조세를 면제해주는 복호(復戶), 상으로 관직을 내리는(賞職) 등의 형태로 기념했다. 즉 조선시대 포상이란 정문을 세우는 것을 제외한다면 포상을 받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전이였다. 또한 일부 전란 당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연말에만 포상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박주, 1990: 220).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 효자·절부에 대한 위상은 높았고, 이 특전이 포상받은 개인과 가문에 최고의 영예가 되었다. 다만 정문을 세우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기념하는 방식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들면서 포상제도와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형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근대 일본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마련한 포상제도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이때 포상은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다(박선영, 2020: 1-10).

조선총독부가 공동체적 가치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주입하여 단기간 내 사회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에서 ‘공(公)’은 그 개념을 국가로 치환해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독특한 일본형 유교 윤리로 재탄생하였다. ‘공’을 위한 개개인의 희생은 ‘선(善)’으로 둔갑되어 주입되었다(설주희, 2020: 52-53).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공(公)’ 개념을 확립하여 공적 영역을 형성하였고, 개개인의 조선인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하나의 공동체로써 통합해나가고자 하였다(윤해동·황병주, 2010: 63). 이때 하나의 공동체는 일본 ‘천황’에 충성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또한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공동체’를 조선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익숙한 것에 새로운 것을 침투시켜 사회를 통합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전략은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효자 절부를 포창(褒彰)함에는 그 문(門)을 세우고, 그 역(役)을 면제하였

다. 금일의 표창은 이와 같이 정려(旌閭), 복역(復役)의 방식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선을 칭찬하고 그 행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동일할 것이니 그런즉 금회의 표창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에 관감흥기(觀感興起)할 사람이 많은 것을 바라며 믿는다(『매일신보』, 1924. 1. 7.).

조선총독부는 조선 시대에 효행을 상징하는 기념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근본적인 목적은 모범행위에 대한 규범을 선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처럼 내면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인 것의 본질이 같다고 이해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무의식 중에 동의하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왕조를 대체해나가면서 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논리로 효용 가치가 있었다. 효행 표창은 ‘공’을 위한 선행으로 포장된 개인의 희생을 치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 가치가 있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효행 표창은 새로운 지배권력이 양성하고자 한 ‘선량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선전하여 기념하고자 했다. 이에 공식 기념행사인 ‘표창식’을 만들었던 것이다. 표창식은 집단적 기념행위였다. 행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군중에게 새로운 ‘국민’의 정체성을 선전할 수 있고, 연장선 상에서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효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창식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군중을 한 데 모아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표창장 전달 과정을 관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대별로 효행 표창식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독부에서는 시정 5년을 기념하여 지방의 효자·절부를 대상으로 표창수여식을 진행했는데, 도청 또는 부청, 군청에 상당한 식장을 설치하고, 경찰관 면장 및 기타 지방유력자가 참석한 후에 도장관, 부윤, 군수 등이 표창 취지를 설명하고 오랫동안 향당의 모범이 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엄중히 훈유하였고,……장래 한층 견고히 그 몸을 지키는 동시에 이러한 광영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엄숙한 가운데 식이 종료되었다더라(『매일신보』, 1916. 5. 6.).

② 강릉향교 명륜당에서 4월 16일 오후 1시부터 군수, 서무과장 및 재무과장, 군속(郡屬),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 회장, 면장, 유지와 신문기자 100여 명, 수선강습소(首善講習所) 생도 180여 명이 집합한 가운데 효자·절부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일동 경례(敬禮)하고, 본 군수 고사(告辭)와 내빈의 축하, 표창자의 답사가 있었다(『매일신보』, 1923. 4. 24.).

③ 향교재산으로 관내 효자·절부에 대해 8월 25일 평택향교 낙성봉안제(落成奉安祭)를 맞이해 군수, 주임 및 관계자, 각 학교장, 경찰서장, 면장, 지방 관민 유지, 보통학교 생도, 지방개량강습생, 봉안제 제관(祭官)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봉안제를

거행하고, 향교준공식을 시행한 후, 효자·절부 표창식을 진행했다. 먼저 군수의 훈화가 있고, 내빈 중 학교 교장의 축사, 수상자 대표로 답사하고 오후 3시쯤에 해산했다(『朝鮮新聞』, 1930. 8. 29.).

종합하면 당시 효행 표창식의 진행 순서는 관민의 내빈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도장관 및 군수의 개회사 후 표창장 전달, 도장관 및 군수의 훈시, 내빈 축사, 표창자의 답사 후 폐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표창식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렇듯 효행 표창식은 강점 초기부터 조선인들에게 ‘유교적인 것’을 익숙한 관행으로 여기게 함과 동시에 조선왕조를 대체한 새로운 지배권력의 등장을 과시하는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효행 표창식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통제와 규율권력이 작동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표창식 개최 시간이 정확히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 초기부터 조선의 일상 시간 체계를 일본식으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을 잠식해 나갔다(안주영, 2020: 48-58). 이렇게 새로운 지배권력에 의해 조선인의 일상 시간이 통제되었던 것이고, 표창식 또한 태생적으로 통제에 기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축·제일(祝·祭日) 당일에 표창식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위 사례를 보면 시정 5주년을 기념하거나 향교 석전제(釋奠祭), 봉안제(奉安祭) 등 제일에 표창식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축·제일은 메이지 시기 만들어진 국가기념일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건국 기념일인 기원절(紀元節),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한 천장절(天長節)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각 지역의 축·제일 당일에 무조건 일본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축·제일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조누리, 2020: 204-212). 이처럼 축·제일은 그야말로 국가를 상징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선전이 가능했다.

두 번째로, 대중 동원에 탁월한 장소를 선택하여 표창식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도청, 부청 등의 관청이나 학교, 향교 등이 있었다. 집단적 기념행사인 만큼 다수의 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오미일, 2011: 222-229). 효행 표창식은 보통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이 중 향교는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유교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조선총독부의 행정 관리 체제 내로 편입되면서 지배정책을 선전하는 곳으로 변질된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향교 석전제는 조선시대와 달리 그동안 출입하지 못했던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관공리를 포함하

여 학교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면서 참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장순순, 2020: 54-55). 이는 석전제를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향교에서는 보통 춘·추계 석전제 행사 후 강연회를 개최하는 일이 많았다. 강연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김명우, 2009: 137-142). 석전제 당일 수많은 대중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효행 표창식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장치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각적 지배 효과를 연출하였다. 표창식의 주인공인 상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계 질서를 상징한다. 더불어 무거운 분위기에서 표창식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장관은 표면적으로 수상자의 모범 행동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다수 군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창식 순서 상에서 보면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양상이 보인다. ②의 사례처럼 일동 경례를 하거나, 표창식 내내 표창 전달 과정을 바라보는 군중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이렇게 표창식은 무의식 중에 신체를 통제하는 규율이 작동되어 조선총독부, 더 나아가 일본 ‘천황’에 대한 복종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구조적 성격을 띤다.

효행 표창식은 ‘선량한 국민’에게 특전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였다. 상을 주는 자, 받는 자, 이를 ‘우러러 보는’ 다수 군중이 한 공간에 모인다. 군중들은 상을 주고 받는 장면에서 조선총독부가 통치 권력을 대체해나간 것을 목격함과 동시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전통적 관습인 효행은 새로운 사회규범으로써 파편화되었으며, 그것은 표창식이라는 무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의 무의식 중에 내면화되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전통적 관습이 소환되어 일상생활에 새로운 의미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전통적 관습은 조선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익숙한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행위규범과 사회질서를 형성하면서 조선인들의 마음에 침투시켰다. 서서히 과거를 망각해 새로운 일본제국주의를 내면화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전통적 관습 중에서 ‘효행’을 주목했다. 오랫동안 효행은 동양의 고유한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었다. 조선왕조 또한 효행을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수립했고 일반인을

교화시켰다. 오랫동안 효행은 조선인이 꼭 지켜야 하는 도리였으며,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내재화되었다. 이렇게 조선인에게 조선왕조의 ‘낯은 관습’은 뿌리 깊게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총독부는 최우선적으로 조선인에게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익숙한 관습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효행은 곧 ‘선행’으로 부각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효행 표창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것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효행은 곧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써 이해되었다. 결국 효행 표창의 최종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선량한 국민’으로 탄생시키는 데 있었다. 일본 ‘천황’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효는 전통의 탈을 쓰고 새롭게 규범화되었다. 특히 아동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행위규범이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선전하여 기념하고자 ‘효행 표창식’을 새로 탄생시켰다. 효행 표창식은 집단적 기념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조선왕조를 지우고 조선총독부가 권력을 장악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배권력의 강력한 통제와 규율권력이 작동하였다. 효행 표창식은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무대였다. 이로써 새로운 ‘국가-국민’의 소속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위계질서가 정당화되었다. 또한 효행 표창식은 대중을 동원하기 탁월한 장소인 관청이나 학교, 향교 등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향교에서 석전제나 봉안제 등 행사를 진행하며 효행 표창식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리고 효행 표창식은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효행 표창식에 참여한 대중이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의도하였다. 일동 경례를 하게 한다든지, 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등으로 대중의 신체를 통제하였다. 표창식은 시각적 지배 효과를 연출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무의식 중에 신체를 통제하는 규율이 작동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 더 나아가 일본 ‘천황’에 대한 복종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구조적 성격을 띤다.

일제강점기 전통적 관습인 효행은 새로운 사회규범으로써 파편화되었으며, 그것은 표창식이라는 무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의 무의식 중에 내면화되었다. 본고는 식민권력이 만들어진 전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효행 표창식에 대해 당시 인식이라든지 실질적인 활용 효과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효행 이외 전통적 관행의 근대적 내면화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명우(2008), “日帝 植民地時期 郷校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전·문철수·이병담·김현석·정승운·김용갑·서기재·박제홍(2006), 『朝鮮總督府 初等學校 修身書 原文 上, 原文 下』, 서울: 제이앤씨.
- 김윤희(2019), “근현대 유교담론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현대유럽철학연구』, 53: 29-63, <DOI: 10.20974/dasein.2019..53.29>.
- 김진균·정근식 편저(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 김혜영(2017), “조선총독부 제정 「의례준칙」의 보급과 시행실태”, 『민속학연구』 39: 165-185, <DOI: 10.35638/kjfs..39.201612.006>.
-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 저, 한석정 역(2003),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서울: 이산.
- 류미나(2007),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309-341.
- 류미나(2010), “19c말~20c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東洋史學研究』, 111: 127-158.
- 박선영(2016), “일제강점기 효행표창 현황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54: 401-439.
- 박선영(2020), “식민지 조선의 포상정책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1990),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서울: 一潮閣.
- 설주희(2020),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 소환과 경제 경쟁 프로젝트 -익산문묘(益山文廟)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41: 51-83, <DOI: 10.31929/namdo.2020.41.51>.
- 심산사상연구회(1997), 『김창숙문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안주영(2020), “일제강점기 국가 역법과 이데올로기적 시간체계 -국가축제일과 국가기념일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2: 37-84, <DOI: 10.21318/TKF.2020.11.72.37>.
- 오미일(2011), “전시체제가 지역사회의 기념(일)의례와 동원의 일상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립』, 40: 201-232.
-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est Hobsbawm) 저, 박지향·장문석 옮김(2004),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 윤해동·황병주(2010),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서울: 책과함께.
- 이병담(2007), 『한국근대 아동의 탄생』, 서울: 제이앤씨.

- 이명화(1993),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36.
- 장순순(2020),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泰東古典研究』, 45: 45-75, <DOI: 10.31408/tdicr.2020.45.45>.
- 조누리(2020), “일제강점기 초기 축·제일(祝·祭日)의 시행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65: 193-226.